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현안과 대응

송대성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독일 통일 과정에서 정당체계의 변화와 역할

김영태 /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연구위원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현안과 대응

송대성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현재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다. 북한은 과연 가까운 시일 내에 대포동2호를 발사할 것인가? 북한은 김정일지도체제 강화, 북한의 생존 카드로서 최대 활용, 한국을 배제한 미국과 각종 협상 전개, 서해 해전 패배에 대한 자존심 손상 회복, 남한의 대북 포용 정책 차단이라는 차원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협상의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은근히 흥정을 하고 있는 점,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진정으로 발사를 차단하려고 하는 점, 발사로 인해 실리적인 각종 지원 사항들이 차단됨은 물론 다시 그러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대단히 어려운 점, '막가는 국가'로 더욱 강한 이미지 낙인 및 외부 지원 중단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부 결과에 대한 입장은 미국과 한국이 유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비슷하며, 일본의 입장이 조금 상이할 것이다. 만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현 정부는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반대할 것이며, 단지 한시적인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일시적인 채찍 정책을 구사할 수 있으나 결국은 대북 포용 정책을 다시 구사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군사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및 외교적인 차원에서 한시적인 채찍 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군사적인 조치를 비롯하여 강한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요구할 것이며, 강한 채찍 정책을 구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노력은 한국과 미국의 공조없이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부에 관계없이 북한을 상대할 것이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발사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내심 바라지는 않지만, 발사한다고 하여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볼 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우리의 대책은 ① 한·미·일 3국공조체제 강화, ② 힘 혹은 화해에 의한 한반도 평화 확보, ③ 힘·합의에 의한 북한 대량 살상 무기 생산 및 사용 포기 유도, ④ 북한 사회의 정상화 및 국제화 지원, ⑤ 교류·협력 증진 및 신뢰 구축 등을 구사하여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경우 한국과 미국은 보다 적극적인 대북 포용 정책을 전개할 것이며, 일본도 내심 만족해하면서 자체의 군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경우 현재와 같은 對한반도 정책들을 구사할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경우 한국이 취하여야 할 대책은 ① 북한의 재발사 재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계속적인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 ② 북한 사회의 정상화 및 국제화 지원 노력, ③ 교류·협력 증진 및 신뢰 구축 강화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야만 한다.

머리말

부

한국 과연 금년 내에 장거리미사일 대포동2호를 실험 발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인 관심거리가 되어 있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 및 발사가 이처럼 세계적인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세계사 속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국가 경영이 극히 비정상적이고 불량한 국가인 북한이 엄청난 대량 살상 위력을 갖춘 무기를 제조·생산한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국가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는 것도 세계 평화를 위해 충분히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하물며 지난 반세기 동안 이 지구상에서 돌출적이고 비이성적인 행위들을 가장 많이 표출하면서 소위 테러 국가 부류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 가공할 위력의 대량 살상 무기를 실제 보유한다는 것은 동북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 유지 차원에서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인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1985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전쟁보다는 평화, 군비 증강보다는 군비 감축, 갈등보다는 화해라는 국제 정치의 큰 흐름을 역류케 하는 계기를 마

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작년 8월 31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인공위성 발사로 인해 일본이 받은 충격은 1년이 경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후 사실상 일본은 장기적인 군사력 증강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들은 지난날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악몽을 회상하면서 신경이 곤두서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자극을 받아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하게 되면, 아시아에서 일본의 패권주의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중국이 자극을 받게 된다. 또한 중국이 자극을 받아 군사력을 증강하게 되면, 냉전체제 해체 이후 미국에 대한 유일한 도전 가능성의 국가는 중국이라는 차원에서 미국이 또한 자극을 받게 된다. 이러한 파장의 확산은 8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군축의 흐름을 역류케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셋째, 국력 면에서 초강대국인 미국은 종합적인 국력 면에서 극히 불품없는 테러국

가 북한을 상대로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온갖 노력들을 경주해왔다. 이러한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기어코 강행한다면 이것은 미국의 자존심을 몹시도 손상케 하는 일이며, 이러한 미국의 자존심 손상은 어떠한 후유증들을 동반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때문에 세계적인 관심은 더욱 증대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 정부는 대북 정책 추진에 있어서 ‘평화·화해·협력을 통한 남북 관계의 개선’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이를 위해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 도발 불용·흡수 통일 배제·남북한간에 화해와 협력의 적극적 추진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출범 이후 많은 어려움과 참을성을 갖고 대북 포용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지성을 다한 북한에 대한 포용적인 자세는 지난 1년 반 동안에 상당수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비판의 요지는 현 국민의 정부는 북한의 진정한 실체에 대한 인식의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그 처방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 포용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북한이 다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에 배치하는 경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심화되어질 가능성때문에 더욱 더

관심이 크게 모아지고 있다.

지난 몇개월 동안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재실험 발사에 대한 이러한 세계적인 관심과 우려는 한국은 두말할 것도 없고, 미국 및 일본 등에 의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수없이 표명되어졌다. 일례로서 지난 7월 28일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한국·미국·일본은 지난해 북한이 실험한 것이 인공위성이든 아니든 그러한 것에 흥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의 진정한 목적이 로켓 능력의 실험에 있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실험은 분명히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을 촉구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한·미·일 간 관심의 지대함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본 고에서는 북한이 과연 대포동2호를 발사할 것인지 여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각국의 입장, 우리가 취하여야 할 대책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대포동2호 발사 가능성 여부

북한이 과연 가까운 장래에 대포동2호를 발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그것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에 대한 정보 획득의 어려움때문이다.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

는 첨단 기술들을 총동원하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각종의 정보들을 수집·분석하고 하지만, 그 발사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모든 것이 비밀스럽고 공개되어 있지 않는 북한 사회의 특성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획득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이 허위와 진실을 혼미케 하는 고도의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면서 정보 내지 첨보를 흘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흘리고 있는 정보 내지 첨보들의 진위를 정확히 구분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사실상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의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여러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흥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은 자신이 노리고 있는 조건들의 충족 여부에 따라 발사할 수도 있고 발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자세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발사 여부에 대해 정확한 결론적인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경과하여야만 할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입장이나 그동안 북한이 표출해온 행태들을 분석하면서 발사 가능성 여부를 고찰하고자 한다.

발사 가능성

북한이 종국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인지 아닌지를 예측케 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볼 수가 있다.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유와 그 가능성을 시사케 하는 변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김정일지도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31일 장거리로켓발사체 개발을 김정일의 지도력 강화에 엄청나게 활용하였다. 그들의 인공위성·미사일 발사를 강성대국의 가치를 내걸고 지도하는 김정일의 국가 지도력 덕분이라며 전매스컴을 총동원하여 극구 찬양하였고, 김정일지도체제 강화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활용하고 있다. 지금 북한은 미사일 발사 문제를 국가 주권(soveteign right) 문제와 결부시키면서, 북한은 얼마든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폐고 있다. 지난 8월 6일 제6차 4者회담에서 북한의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외무성 부상 김계관은 “미사일 발사는 주권과 관련된 문제다. 위성 발사는 국제법적으로도 용인되고 있으며 과학 연구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최근 이웃나라(중국)에서 쓸 때는 가만히 있더니 우리가 발사하는 데 대해 무서워하는 이유는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세계의 강대국 미국이나 일본이 발사를 못하도록 아무리 반대하고 위협해도,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할 일은 기어코 추진하는 강력한 지도력을 갖추고 있는 소위 ‘위대한 장군님’이라는 이미지 고양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는 단순한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차원을 넘어, 북한의 생존을 위한 至上의 카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지난 8월 7일 제6차 4자회담에 참석했던 북한의 김계관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미사일 같은 강력한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게 우리의 국방 정책이다”라고 표명하기도 하였다. 북한이 고도의 미사일 제조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제조된 미사일의 해외 수출을 통해 획득되는 외화만이 북한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¹⁾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능력 가운데 경제 능력은 이미 파탄 상태에 들어서 있고, 주체사상을 포함한 이념적인 능력도 세

월이 갈수록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그래서 북한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국가적 능력이란 오직 그들의 군사적 능력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비교 우위를 자랑하면서 내세울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국가 능력은 오직 군사력뿐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북한이 미국을 상대하여 활용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카드는 오직 군사력이라는 카드였으며, 실제로 군사력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북한은 그들의 생존 차원에서 상당한 이득들을 획득한 몇몇 경험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은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핵무기라든가 혹은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위하여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²⁾ 이런 의미에서 북한은 최첨단 미사일 기술 확보를 확인하는 미사일 발사를 시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 금번 미사일 발사 실험을 완료하는 경우(금번 실험 목적은 6,000 km 사정 거리를 도달할 수 있는 엔진 성능 실험임), 북한은 확실하게 미국 본토까지 공격이

1) 1999년 3월 북한은 미국과 제4차 미사일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빌사를 중단하려고 한다면 항후 3년 이상 매년 10억 달러씩 현금을 북한에게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외화를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요구를 미국은 거절하였다.
 2) 1999년 7월 25일 북한의 중앙방송은 “총대만 강하면 천하대적이 덤벼들고 그 어떤 풍파가 덕쳐와도 두려울 것이 없으며 강대한 군사력의 보호 밑에 우리 공화국은 영원히 승승장구하고 강성해질 것이다. … 총대로 정권을 잡은 나라라 할지라도 군사를 계속 중시하지 않고 총대를 억세게 장악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역사를 가진 정권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참극을 겪게 된다”라고 강조하였다(『연합뉴스』(1999. 7.22 29), p.c기3 참조).

가능한 미사일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된다.³⁹⁾ 일단 이렇게만 되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미사일 문제와 관련하여 수많은 협상 주제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협상 주제들을 두고 미국과 북한이 각종 회담들을 전개하는 경우, 이것은 사실상 한국을 배제시키고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 북한이 양자회담 형식 하에 논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북한은 바로 이점을 노리고 있으며, 이것은 사실상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이른바 ‘通美封南’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문제를 논함에 있어 한국을 배제시키고 미국과 북한이 직접 홍정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시도할 수도 있다.

넷째, 북한은 남북한간 대결에서 군사력 분야만은 결코 남한에 양보할 수 없다는 강한 신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서해 해전에서 북한 해군의 패전은 말할 수 없이 북한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킨 사건이었다. 북한은 세계적인 화제 속에 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각종 홍정을 하면서 대포동2호를 발사함으로써, 서해 해전을 통해 손상된 자존심을 깨끗이 회복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북한은 일단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의 대북 포용 정책을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인식할 수도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은 그동

3) 북한 보유 미사일 현황

구분	SCUD-B	SCUD-C	로동-1호	대포동-1호	대포동-2호
실험 발사 연도	1985년	1990년	1993년	1998년 8월 31일	1994년 엔진 실험 1998년 실험 발사
길이(m)	11.25	12.55	15.5	23.5	30.3(추정)
폭(m)	0.88	0.88	1.3	1.3	2.2(추정)
탄두 중량(kg)	985	770	1,000	1,000~1,500	4,000~10,000
로켓수(단계)	1(1단)	1(1단)	1(1단)	4(2단)	4(2~3단)
부스터 무게(ton)	5.38	6.5	6.5	20	n/a
연소 시간초)	70	87.5	87.5	70	n/a
추진력(뉴턴)	134,000	134,000	134,000	540,000 · 1단계: 로동1 사용 · 2단계: Scud-C 사용	n/a · 1단계: 새롭게 제조 · 2단계: 로동1호 사용
사정거리(km)	약 340	약 500	약 1,000	1,500~2,500	4,000~6,000
용도	counter-city	counter-city	counter-city	counter-city	counter-city

자료: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1999. 3.15), *North Korea: A Second Taepo-dong Test?*, pp. 2~5; 김태우, 「미사일 안보와 미사일 주권」(비발간 문서), p. 10.

안 만만치 않게 한국 사회 내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⁴⁾ 남한 정부는 각종 대북 지원 등 지성을 다하여 대북 포용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데, 북한으로부터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은 각종 무력 도발, 서해 교전, 미그기 도입, 대량 살상 무기 구비 등 한국 국민들을 실망케 하는 행위뿐이라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러한 비판을 더욱 격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의 야당과 보수층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김대중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하여 강도 높은 공격을 가할 것이며, 이러한 비판들에 의하여 대북 포용 정책은 그 추진 능력 면에서 많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북한은 남한의 대북 포용 정책의 근본 목표가 우선은 북한 사회 변화에 있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멸망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을 차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한의 대북 포용 정책 차단용으로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발사 중단 가능성

북한은 그동안 대포동2호를 발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기존 발사대를 높이고, 발사판을 넓히며, 기지내 연료 창고에 액체 연료를 반입하는 등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들은 결국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거나 중단할 것이라고 예측케 하는 변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그동안 다음과 같은 몇가지 조건들만 충족시켜주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은근히 표명하고 있다. 지난 7월 30일 북한의 중앙방송은 ① 미국의 대북 제재 철회, ② 미국의 군사 위협 금지, ③ 한·미·일 공조 중단, ④ 주한 미군 철수, ⑤ 평화협정 체결 등 다섯 가지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루어지면 북미 관계가 개선되어질 수 있고 미사일 발사도 재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 지난 8월 7일 제6차 4者회담에 참석했던 북한의 수석대표 김계관은 “(미국이) 쏘지 말라고 하는데,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그만두면 쏘지 않을 것이고, 그때 가서 볼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몇가지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지면 발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흥정 가능성을 천명하였다.⁵⁾ 그러나 북한의 요구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발사한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4)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op. cit.*, p. 4.

한국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두고 흥정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가능성은 많다.

둘째,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진심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부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자존심 손상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미국은 때로는 당근을 때로는 채찍을 제시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도록 각종 노력들을 경주해왔다. 지난 7월 말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포기하도록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고, 8월초 북미간 제네바미사일 회담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면 미국 내에 있는 북한 자산 동결을 해제할 것이다”라고 천명하기도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미국은 만약에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고 끝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대북 지원들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피력하였다. 그대신 발사를 중지하면 응

분의 보상을 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지원 사업들이 모조리 중단되면 대단히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현재까지는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에도 군사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지원 사항이 중단되고 북미 관계가 냉전 관계로 돌아가서 점점 더 관계가 악화되어지는 경우, 군사적인 조치까지 확산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북한이 내심 지난 봄 미국이 실질적인 주역이 되어 치루었던 코소보 전쟁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예의 주시하였던 것도 미국의 군사적인 조치 사항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미국의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끝내 대결의 장으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은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들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미사일은 발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북한은 실리적인 차원에서 세계 각국들로부터 식량 지원을 받는다든가 KEDO

5) 1999년 8월 7일 제6차 4자회담에 참여하고 있었던 북한의 수석대표 김계관은 “우리는 외화벌이를 위해 미사일을 수출하고 있다. 외화가 많이 들어오면 미사일을 수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은근히 흥정하는 태도를 보였다(『조선일보』(1999. 8.9) 참조). 한편, 1999년 8월 26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황원탁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독언론인클럽 조찬 강연에서 “북한은 미사일을 대미 협상 카드뿐만 아니라 대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천명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놓고 흥정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동아일보』(1999. 8.27) 참조).

의 경수로 건설 및 중유 공급,⁶⁾ 기타 각종 지원 사업들이 대포동2호의 고집스러운 발사에 의하여 차단된다면 그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그동안 한·미·일 3국은 수차례 걸쳐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끝내 발사한다면 대단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분명히 경제 및 외교적인 차원에서 응분의 조치가 있을 것임을 밝혀왔다.⁷⁾ 파탄 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 경제를 겨우 연명케 하는 것이 국제적인 지원때문인데, 이것마저 완전히 중단된다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보통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은 실리 면에서 이러한 곤혹스러움을 자처하면서까지 끝내 대포동2호를 발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넷째,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세계 속에서 '막가는 국가'로 그 이미지가 더욱 낙인되어질 것이다. 현재 북한의 최대 국가적인 목표는 '생존' 하는 일이며,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① 인민들의 苦難, ② 남북한 전쟁에서의 승리, ③ 외부로부터의 지원 세

가지 길밖에 없다고 한다. 인민의 苦難은 이미 한계에 이르러 있다. 남북한간의 전쟁을 통해 북한이 승리한다는 보장은 더욱 기대할 수가 없다. 결국 북한은 생존하기 위하여는 외부로부터 지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제적으로 또 다시 '막가는 국가'라는 강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는다는 것은 가장 유일한 생존 수단을 상실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부를 지금 이 순간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북한 자신이 확고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지금 흥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와 발사하지 않는 경우 모두 다 이익도 있고 손해도 있기 때문에 북한은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8월말 현재의 시점에서는 발사되지 않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6) 1994년 10월 21일 북미간에 서명한 소위 제네바 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의 KEDO의 대북 지원 사항은 "미국은 2003년을 목표 시한으로 총발전 용량 약 2,000 MWe의 경수로를 건설하여 북한에게 제공하고 … 북한의 평연 감속 원자로 동결에 따라 상실된 에너지를 대체하여 1995년 10월까지 15만 톤의 중유를 우선 공급하고, 첫번째 경수로가 완성되는 시기까지 매년 50만 톤의 중유 공급을 미국이 주선한다"는 내용이다(THE NUCLEAR ROUNDTABLE(Background Document), December 15, 1996 <http://stimson.org/rd-table>).

7) 예를 들면, 1999년 8월 27일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평통 일본 지역 자문 위원 460여 명과 청와대에서 다음과을 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아주 어려운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으면 평화 보장은 물론 경제 발전과 국제 사회 진출을 도와주는 등 응분의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조선일보'(1999. 8.28) 참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각국의 입장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한반도 정세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입장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각국의 입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사하는 경우와 발사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하되 ① 군사적인 조치 가능성 여부, ② 경제적인 지원 조치 여부, ③ 외교적인 차원에서 당근·채찍 사용 여부 등 세 가지 기준에 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

○ 발사할 경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한국은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한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대응한다는 것은 현 정부가 대북 포용 정책을 포기함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하는 경우에는 군사적인 대응 조치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군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대북 포용 정책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점을 누차 천명하기도 하였다. 단, 미국이 강경한

군사적인 조치로 선회할 경우에는 미국의 군사적 조치에 반대하다가 역부족인 경우는 군사적인 조치에 동조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대신 한국은 남북한 군사력의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남한 자체의 군사력 증강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특히, 미사일 개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국 정부는 일시적으로 적당한 수준의 경제적인 제재 조치는 취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취하는 조치는 전면적인 경제 제재 조치는 아닐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여 KEDO의 분담금 42억 달러 지원을 중단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김대중 대통령도 분명히 천명하였다(1999년 8월 5일). 한국의 대북 경제 제재 조치는 미국 및 일본과의 공조체제 유지 하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그 정도는 이들의 강도에 따라 조정될 것이지만, 그것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될 것이다.

외교적인 차원에서 한국은 일시적으로 채찍의 흉내를 내면서 북한을 강하게 다스리는 시늉을 내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채찍을 강하게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 미국의 채찍 사용이 위낙 강하여 북한을 때려서 죽

일 수도 있다는 감이 있을 경우, 그리고 확실히 죽인다는 보장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은 강한 채찍을 구사할 수도 있다.

○ 유예 혹은 중단할 경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유예 혹은 중단하는 경우, 남한 정부의 군사적인 제재 조치 · 경제적인 제재 조치 · 외교적인 채찍 사용이란 있을 수 없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였다는 확실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남한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을 대북 포용 정책의 성과로서 해석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북 지원 및 포용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미국

○ 발사할 경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1999년 5월 미국 - 북한정책조정관 페리(William J. Perry)의 대북권고안을 비롯하여 미국의 각종 대북 노력들은 철저히 실패한 것으로 해

석된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현재의 상황 하에서 미국은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⁸⁾ 물론 미국 내에서 공화당이나 보수파들은 군사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 미국의 행정부를 이끌고 있는 클린턴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여 대북 군사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만약에 미국이 군사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본 골격이라고 볼 수 있는 1994년 제네바의 북미기본합의서(*Agreed Framework*)를 미국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됨은 물론,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 정책은 철저히 실패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⁹⁾

둘째, 미국의 입장에서 대북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여건이 되지는 않음은 1993~94년 북한의 핵위기 때와 동일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군사력을 행사하는 과정 자체는 또 다른 한국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한국전쟁의 발발에 대해서는 당사국인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강대국들 어느 누구도 지지할 나라가 없다는 사실 등 국제적인 여건이 따르지

8)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op. cit.*, p. 6.

9) 1999년 8월 3일 미국 국무성 대변인 제임스 루빈(James Rubin)은 “미국 정부는 비록 북한의 미사일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점과 지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미국과 동북아 지역 안보 문제에서 하나의 중요한 장치가 되고 있는 1994년의 북미제네바기본합의서(*Agreed Framework*)는 유지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The Korea Herald*(1999. 8.4) 참조).

못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군사력을 행사하는 경우, 특히 중국의 반발은 자칫 잘못하면 미국과 중국 직접 충돌의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높은 가능성때문에,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현실이다. 단지, 미국은 직접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지만 이지스艦을 동해로 집결시킨다든가 미7함대를 북한의 턱 앞에 들이대는 등 군사적인 위협을 가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선 미국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목표들이 획득될 때까지 강력한 각종 경제적인 제재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의 대외 정책 가운데 가장 논란 가능성이 높은 중요 정책 이슈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對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미국 공화당은 민주당을 공격할 가장 강력한 소재로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화당의 공격을 어느 정도 차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대통령선거가 끝날 때까지 채찍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이 계속하여 채찍을 구사하는 경우 그동안의 대북 포용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현 미국의 행정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유예 혹은 중단할 경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유예 혹은 중단할 경우, 미국 역시 군사적 제재 조치·경제적 제재 조치를 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오히려 경제적인 면에서 제재 조치보다는 미국내 북한 자산(약 1,300만~1,400만 달러 추정) 동결 해제 등 오히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홍정 내용을 남한에게 떠넘기려고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미간에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계속 당근을 제시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포용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상승이 되면 북한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주한 미군 철수라든가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등이 제7차 4者회담의 의제로 고려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 발사할 경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군사적인 조치를 제일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지난해 8월 북한의 미사일·인공위성 발사 때 받은 충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소위 '북한위협론'의 논리 속에 일본의 평화헌법 및 전수방위 원칙을 위배하면서 과감한 군사력 증강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8월초 일본은 「장기적인 군사력 건설」이라는 내부 정책 보고서에서 ① 해상자위대는 2015년까지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한 4만 톤급 軽航母 2 척과 E-2c급 조기경보기를 보유할 것이며, ② 정찰위성 도입,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어체계(TMD) 구상에 참여키로 결정하는 등 군사력 증강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중국을 자극하게 되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다시 미국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결국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세계적인 군축의 흐름을 역류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독자적으로 군사력을 행사하

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미국과 공조하여 군사적인 제재를 취할 것을 강력히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 제재 측면에서 일본은 기존의 대북 경제 지원을 확실하게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8월 4일 일본의 외무상 가사히코 고무라는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일본은 국민들의 여론때문에 KEDO프로젝트에 협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일본은 북한에 대하여 채찍을 사용하면서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이다. 상당한 기간 동안 강경한 자세를 취하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생산 및 군비 증강을 차단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 유예 혹은 중단할 경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유예 혹은 중단할 경우, 일본이 북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군사적 제재 조치를 주장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일본은 자체의 군사력 증강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일본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함에 있어서 그 지원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 지원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지원할 것이다. 외교적인 차원에서는

일본은 당근 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그러나 늘 채찍도 함께 마련해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이다.

중국

○ 발사할 경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직접 관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정책이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북한의 자주권 문제로 해석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중국은 어떠한 군사적인 조치도 반대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정치적인 차원에서 “북한이 스스로 떠나지 않는 한 결코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북한의 입장은 근히 지지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사적인 조치 반대 입장을 폴 는 또 다른 이유로서는, 지난 8월 2일 중국 자신이 ‘동평(東風)31호’라는 이름의 신형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이미 앞장서서 발사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가급적 발사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북한

의 미사일 발사가 계기가 되어 미국과 일본이 공조체제를 형성하면서 중국을 목표로 한 미국의 NMD(National Missile Defense)를 기반으로 아시아에서 TMD체제를 구축함을 가장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경제적인 면에서 제재하는 것도 반대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과는 미사일 발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대로 우호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 유예 혹은 중단할 경우

중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보다는 발사를 중지하면 내심으로 더 환영할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케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경우 중국은 북한과 우호 관계를 그대로 유지 할 것이다.

러시아

○ 발사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러시아는 군사적인 조치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

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에 대하여 못마땅해할 것은 사실이다. 또한 경제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여론 및 상황을 보아가면서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채찍 사용을 주장하기보다는 당근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 유예 혹은 중단할 경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경우,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하등의 변화없이 현재와 같은 대북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한 대응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부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와 유예 혹은 중단하는 경우를 모두 가정하여 그 각각에 대하여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시나리오 1: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비슷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입장이 비슷하며, 일본의 입장이 좀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라도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다. 단지, 일정한 기간 한시적인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시적인 채찍 정책을 구사할 수도 있으나, 결국 대북 포용 정책을 취할 것이다.

미국은 현 클린턴 행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에도 군사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표 1〉 시나리오 1 :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시나리오 1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예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군사적 조치 무. 일정 기간 적당한 수준 경제 제재. 일시적 채찍 흉내. 포용 정책 계속 · 미국: 군사적 조치 무. 경제적 조치 실시. 한시적 채찍 구사. 포용 정책 중지 · 일본: 군사적 조치 요구. 경제적 조치 강화. 채찍 사용 강경책 구사 · 중국: 군사적 조치 반대. 경제적 제재 조치 반대. 채찍 사용 반대 · 러시아: 군사적 조치 반대. 경제 제재 조치 반대 50%. 채찍 · 당근 50%
대책	<p>① 한 · 미 · 일 3국공조체제 강화 → ② 한반도 평화 유지(힘 · 화해에 의한 평화 확보) → ③ 북한 대량 살상 무기 생산 금지. 사용 포기(힘 · 합의에 의한 포기) → ④ 북한 사회 정상화 · 국제화 유도 → ⑤ 교류 · 협력 증진 및 신뢰 구축 강화</p>

경제 및 외교적인 조치로서 한시적인 채찍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대북 포용 정책을 중지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결국 장기적인 목표로서 북한을 개방시키고 정상적인 국제 정치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군사적인 조치를 비롯하여 경제적인 제재 조치 등, 가장 강경한 자세로서 채찍 정책을 선택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노력은 미국이나 한국의 공조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노력은 한국 및 미국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러한 일본의 입장이 한국이나 미국의 대북 정책에 그대로 반영된다고는 볼 수 없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일본은 더 이상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주저함없이 본격적으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이러한 일본의 군사력 증강 노력은 중국을 자극하게 되고 중국의 자극은 세계적 군축의 흐름을 역류시킬 가능성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하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않음은 물론, 한·미·일 3국이 대북 군사 혹은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데 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강경한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내심 환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하여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미국·일본이 강력한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려고 할 경우에 적극적인 반대를 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은근히 공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한국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홍분하거나 순간적인 감정에 얹매어 강경책을 구사하기보다는 차분하게 한·미·일 3국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데 노력을 해야만 한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대하여는 우선 그와 상응하는 군사력을 증강하여 북한이 지나치게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국제공조체제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만 한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대하여 어차피 강경한 채찍으로서 해결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통해 장기적인 과제로서 해결을 해야만 한다. 이러

한 의미에서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야만 한다.

둘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에 한국이 가장 신경을 기울여야 할 일은 한반도의 평화 확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철저한 3국간 공조체제 하에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자체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차단했어야 하는데, 일단 그러한 공조 사업의 실패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북한이 비록 미사일 개발까지는 북한의 자유의지대로 하였더라도, 그 사용만큼은 절대로 북한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한·미·일 3국이 공조하고, 남한 자체의 군사력도 튼튼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다. 만일 북한이 그들의 군사 역량을 함부로 사용할지라도 오직 그 결과는 북한만이 망하고 없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북한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각종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당근 또한 채찍을 동원하든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동원하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한반도에 확고한 평화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인 목표는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의 생산을 중지시키고 그 사용을 포기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생존의 유일한 최고 효율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이의 100% 활용을 위하여 북한은 온갖 노력을 경

주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인내력을 갖고서 이러한 노력을 차단하고 끝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포기시켜야만 한다.

넷째, 북한 사회의 정상화 및 국제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이들을 생존 수단으로 삼으려는 북한의 국가 전략은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이 자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러한 북한의 국가 전략은 우물안 개구리 같은 북한 사회의 비국제화 내지 비개방화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임을 북한에게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북한을 국제 사회에 정상적인 일원으로 참여시키고 정상적인 국가들의 국가 경영을 북한이 자각하도록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다. 즉, 북한이 극히 비이성적·비정상적 국가 경영 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인 국가 경영을 모색한다는 것은, 결국 한반도 평화 문제와 대량 살상 무기 개발 포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정상적인 사회로 어느 정도 변모하고 국제화도 모색하게 되면, 남북한간에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모색할 수가 있다. 북한이 현재와 같은 극히 비정상적·비이성적인 사회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도 교류 협력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시나리오 Ⅱ : 미사일 발사를 유예·중단할 경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특별히 군사적·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보다 적극적인 대북 포용 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한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종전에 비해 보다 적극성을 띠고 대북 지원을 추진할 것이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에 내심 만족하면서도 일본 자체의 군사력 증강을 위하여 장기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對한반도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은 첫째,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를 강화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선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케 하였지만 향후에 다시 이러한 문제가 발

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향후에도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위협하면서 이를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북한의 노력을 차단하기 위하여 3국은 긴밀하게 공조를 계속해야만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는 단 일회성 행사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 북한 사회의 정상화 및 국제화를 위하여 노력을 해야만 한다. 북한 사회의 정상화 및 국제화없이는 북한이 국가 경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고, 북한의 정상적인 국가 경영으로의 변화없이 진정한 의미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확보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남한은 진정한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북한 사회의 정상화 및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남한은 정상적인 북한 사회와 참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참된 남북한간의 신뢰 구축을 형성하면서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여야만 한다. ❸

〈표 2〉 시나리오 Ⅱ: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경우

예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군사적·경제적 일체 제재 조치 무. 보다 적극적인 대북 포용 정책 · 미국: 군사적·경제적 제재 조치 무. 보다 적극적인 대북 포용 정책 · 일본: 군사적·경제적 제재 조치 무. 군비 증강 · 중국: 군사적·경제적 제재 조치 무. 우호 관계 유지 · 러시아: 변화없이 현재와 같음
대책	① 3국 공조체제 강화 → ② 북한 사회 정상화·국제화 · ③ 교류 협력 증진·신뢰 구축 강화